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강철희·김교성·김영범**

한국에서도 경제위기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적 자료를 사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해 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이며, 연구기간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이다. 본 연구는 결합회귀분석의 한 방법인 Fuller-Battese 모델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전반적으로 실업률의 변화와 부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세부 프로그램들이 실업률의 변화에 대해 갖는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 프로그램 중 실업률과 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구직서비스였으며 고용보조는 실업률의 변화와 정적인 방향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경우 실업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셋째, 실업보험은 적극적

* 본 논문은 2001년도 두뇌한국 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강철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교성(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전임강사).

김영범(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두뇌한국 21사업 교육연구단 박사연구원).

노동시장정책과 적절하게 결합될 경우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서구의 경험이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에 관해서 논하였고 아울러서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과제에 관해서도 논하였다.

1. 서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실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실업은 개인적으로 소득의 감소와 숙련 및 근로 의욕의 상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보다 앞서 고실업을 경험한 바 있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실업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해 왔는데, 1980년대 들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우선 실업 감소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소득 상실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적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도 1980년대 중반이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효과에 대해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어떤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이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OECD, 1993: 39~48; Calmfors, 1994; Layard, Nickell, & Jackman, 1991; Layard, 1997).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하다는 점 때문이다. 즉 연구들이 관련 변수들을 얼마나 통제하였는가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분석대상 국가, 분석 시기, 그리고 사례수가 다름으로 인해 상반된 연구결과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감소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자료를 기초로 결합회귀분석(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긴 시계열과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다른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업보험 수혜는 근로의욕을 낮춤으로써 실업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올라프손(Olafsson, 1992)은 근로의욕이 소득뿐만 아니라 구직의 용이함 및 구직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그 내용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로서 분석할 뿐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특정 국가 사례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은 이들 세부 프로그램들이 실업률 감소에 대해 가지는 효과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Forslund, & Krueger, 1997; Edin, & Holmlund, 1991).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크게 직업훈련(job training), 고용보조(employment subsidy),¹⁾ 그리고 구직 서비스(employment service)²⁾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IMF 경제위기가 끝났다는 안도와 더불어 경제위기가 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실업을 낮추는 수단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정책 개발의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데,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제도의 도입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을 뿐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감소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보다 체계화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고용보조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을 포함하는데, 민간부문에 대해 임금을 보조하는 것과 정부가 공공근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다.

2) 이외에도 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근로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실직자들을 위한 창업지원 등을 포함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소극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들, 예를 들면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 등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실업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Girsburg, 1983; OECD, 199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표는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 구직서비스, 고용보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능은 기존 취업자의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후퇴시 기업의 임금비용을 보조하거나 또는 기업의 재고 축적을 보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두 번째 기능은 일단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가능한 한 빨리 재취업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업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이나 이주 보조금 등의 구직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능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제도 비교에 주목하는 연구(Schmid, Reissert, & Bruche, 199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소득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Aaberge et al., 2000), 그리고 실업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OECD, 1993: 39-48; Calmfors, 1994; Layard, Nickell, & Jackman, 1991; Layard, 1997)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제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은 그 효과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즉 어떤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연구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경험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논리적 측면에서도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단지 논리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과 구직서비스가 마찰적 또는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어진 결원하에서 실업자 수를 감소시킨다. 둘

째, 직업훈련은 노동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인적자본론에서 주장하듯 고용과 임금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자들을 노동과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숙련박탈을 저지하고 근로경험을 유지하게 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효과적으로 구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구직 경쟁의 증가는 낮은 임금인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실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는 달리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는 연구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행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해고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만든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고용이 감소된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들을 훈련 프로그램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이들의 구직활동에 대해 속박효과(lock-in effect)를 갖게 된다. 즉 훈련참여기간 동안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이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업률을 하락시키지 못한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보조 프로그램은 정규직 고용을 대체할 뿐이다. 넷째, 생산성의 증가가 생산규모의 증가로 이어져 고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생산규모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험적 연구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 연구는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³⁾ 미시적 연구는 임금과 고용에 대한 개인별 자료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레그네르(Regnér, 1997), 포스룬드와 크루거(Forslund, & Krueger, 1997), 에딘과 호름룬드(Edin, & Holmlund, 1991)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임금과 고용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이 개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에딘과 호름룬드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룬드와 크루거의 경우는 그러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3) 본 논문은 거시적 연구이기 때문에 미시적 연구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4) 스웨덴을 분석한 레그네르(Regnér, 1997)의 경우 직업훈련의 효과는 부문에 따라 상이하다고 주장하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효과가 없는 반면 사회복지나 의료부문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그러나 미시적 연구는 개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지역 전체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개인 수준에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지역이나 국가 전체 수준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아래의 세 가지의 가능성 때문이다(Blanchflower et al., 1995). 첫 번째 가능성은 자중손실(*deadweight loss*) 효과로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 가능성은 대체(*substitution*) 효과로 이는 고용주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실업자로 기존 피고용자를 대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세 번째 가능성은 전치(*displacement*) 효과로 보조금을 받는 실업자들을 고용할 경우 생산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이나 관련된 다른 부문의 판매가 감소되어 고용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인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미시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명되었다하더라도 거시적인 수준에서 그 효과를 다시금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미시적 수준의 연구에 비해 거시적 수준의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몇몇 연구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리아야드, 니켈 그리고 자크만(Layard, Nickell, & Jackman, 1991)은 실업률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되는 다양한 변수들 중 임금협상제도를 통제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지하듯 실업률은 다양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을 통제했느냐가 중요해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실업수당의 지속기간과 임금대체율,⁵⁾ 단체협상의 포괄범위,⁶⁾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상호조정 능력,⁷⁾ 물가상승의 변화율⁸⁾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

타났다는 것이다.

- 5) 실업보훈 수혜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임금대체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이 약화되고, 유보 임금은 증가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된다.
- 6) 높은 임금인상은 실업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에 포함되는 되는 노동자 수가 많은 경우 노동조합의 지도부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실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임금협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노동조합 지도부는 고용을 대가로 낮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7) 임금협상의 두 주체인 노동과 경영 각각의 집합행동 능력이 클수록 임금증가율은 낮아지는데, 왜냐하면 집합행동 능력이 클수록 임금을 둘러싼 경쟁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임금증가율이 낮아지게 되면 실업이 감소한다.

에 의하면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통제변수가 주로 임금협상제도 관련 변수로 제한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통제 변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1980년대 말부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심을 보여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3)의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앞서의 연구와는 달리 취업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있으며, 통제변수로는 실질임금 변화율,⁸⁾ 실질GDP의 변화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특기할 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다른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프로그램별로 분류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호작용효과의 분석을 위해 실질GDP변화율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총지출변화의 상호작용, 실질GDP변화율과 직업훈련지출변화의 상호작용, 그리고 실질GDP변화율과 직업훈련 및 구직 서비스지출변화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전체로서는 고용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위의 연구는 고용이 증가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이 감소할 때는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실질GDP변화율과 직업훈련지출변화의 상호작용 변수는 고용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률이 상승해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직업훈련지출이 더 증가하는 국가들에서 고용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질GDP변화율과 직업훈련 및 구직 서비스지출변화의 상호작용 변수도 고용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종속변수를 장기실업률로 대체할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변수의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갖는 한계는 통제 변수가 경제상황과 관련된 변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닉켈(Nickell, 1997)의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감소의 효과를

8) 필립스 곡선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아진다.

9) 신고전 경제학에 의하면 실질임금의 증가는 고용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보여주고 있다. 원래 이 연구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변수는 고용보호제도의 엄격성, 실업보험 수혜의 임금대체를, 지급기간, 노동조합의 밀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의견조정 능력, 세율, 물가상승률 등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총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연구들이 대체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인 반면 캄포스와 스킨저(Calmfors & Skedinger, 1995)의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직업훈련, 고용보조, 그리고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업률 감소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고용보조 프로그램에 비해 실업률을 억제하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조 프로그램은 정규고용을 대체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도 실업률을 낮추는 데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해 이들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낮춘다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임금증가율, 물가상승률, 경기주기, 임금협상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얼마나 적절하게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가 연구의 관건이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다양한 통제변수들 중 일부만을 통제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권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3)의 연구는 주로 경제적인 변수들만을 고려한 반면, 라이야드, 니켈, 그리고 자크만(Layard, Nickell, & Jackman, 1991)의 연구는 주로 임금협상제도와 관련된 변수만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차이는 통제변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능한 한 다양한 통제변수를 분석에 포함하고자 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실업감소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3. 연구 방법

1) 연구대상과 변수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8개 국가의 7개 년도로 총 56개이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이며, 기간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이다. 이 국가들만을 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 상 모든 변수와 모든 사례에서 결측치가 없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두 가지 점으로 인해 분석기간과 분석 대상 국가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56개의 사례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많은 편인데,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3)의 연구는 단지 20개의 사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니켈(Nickell, 1997)의 연구도 40개의 사례만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최대한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실업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연령 등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수혜의 임금대체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혜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임금대체율이 높을수록 1인당 평균수혜금액도 높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실업보험 관련변수를 1인당 평균 수혜금액으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대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에 따라 실업에 대한 효과가 상이하다는 선행 연구에 따른 것이다. 프로그램의 범주는 직업훈련, 고용보조, 그리고 구직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구에서 경제성장률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실업보험 수혜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는 실업률에 상반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분석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올라프손(Olafsson, 1992)의 주장을 수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외에 구체적으로 분석에 사

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9)에서 발간한 *Social Expenditure Data*를 근간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공통의 기준을 통해 프로그램별로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외에 국제노동기구(ILO, 2000)에서 발간한 *Labour Market Key Indicators*에서 실업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경제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의 경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5)에서 발간한 *Historical Statistics*와 국제통화기금(IMF, 각년도)에서 발간한 *Financial Statistics*를 통해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관련된 변수들은 스티븐스(Stephens, 1997)가 중심이 되어 정리한 *Welfare State Index*에서 수집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구분	변 수	변 수 구 성
독립 변수	실업자 1인당 ALMP 지출변화	(연간 지출 금액/년 평균 실업자 수) 변화
	실업자 1인당 직업훈련 지출변화	(연간 지출 금액/년 평균 실업자 수) 변화
	실업자 1인당 구직 서비스 지출변화	(연간 지출 금액/년 평균 실업자 수) 변화
	실업자 1인당 고용보조 지출변화	(연간 지출 금액/년 평균 실업자 수) 변화
	실업자 1인당 실업보험수혜액변화	(연간 실업보험수혜액/년 평균실업자 수) 변화
	실질임금변화율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변화
	GDP 변화	1인당 실질GDP 변화
	물가상승률	전년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상호작용변수	실업자 1인당 ALMP 지출변화 × 실업자 1인당 실업보험수혜액변화
중속 변수	실업률	연평균 실업률 변화
	장기실업률	(연평균 장기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수) 변화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기술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변수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들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기술적인 분석에서 실업률과 장기 실업률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정리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변화와 각각의 하부 프로그램인 직업훈련, 고용보조, 구직서비스 프로그램 지출의 변화, 그리고 기타 독립변수들의 일반적 특성과 추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결합회귀분석(*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의 한 방법인 Fuller-Battese 모델을 이용하여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실업률에 대한 시계열분석에서 지적되는 문제의 하나인 불안정성(*non-stationarity*)의 문제(Gujarati, 1995)를 해소하기 위해 종속 변수 및 모든 독립 변수들을 증가율의 형태로 또는 연도 로그편차(*lnit - lnit - 1*) 등의 형태로 변환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결합회귀분석의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위의 분석을 위해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실업률의 변화 및 장기실업률의 변화 = f(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고용보조, 구직서비스 지출 변화), GDP 증가율,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증가율, 실업자 1인당 실업보험 수혜액 변화,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지출 변화와 실업자 1인당 실업보험 수혜액 변화의 상호작용)

$$Y_{it} = \alpha + \sum_{k=1}^P X_{itk} \beta_k + U_{it}$$

여기서 i 는 횡단면 자료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8개 국가를 나타낸다. 한편, t 는 시계열 자료의 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의 8개 연도의 사례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변화비율의 형태로 변환하면서 1개 연도 즉 1985년이 누락되어서 실제 사용된 시계열 연도는 7개 연도이다. 독립변수를 의미하는 P는 분석 모형에 따라 7개 혹은 10개로 구성되었다.

Fuller-Battesse 모델에 따르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위의 공식 중 오차항 U 를 아래의 공식과 같이 가정하는 모형이다. 즉 오차의 구조가 횡단면 자료의 오차, 시계열 자료의 오차, 이들의 결합 오차가 모두 결합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two way random effects 모형의 형태로서, 분산성분(*variance components*)의 추정을 위해서는 상수 적합법(*fitting-of-constants method*)을 사용하고 회귀 계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일반화 최소 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사용한다.

$$U_{it} = v_i + e_t + \varepsilon_{it}$$

4. 기술적 분석 결과

본 절의 기술적 분석에서는 각 국의 각 변수들에 대한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변수들을 결합회귀분석에 사용된 로그편차의 형태가 아닌 원자료 형태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1)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의 추이

<표 2>는 연구대상국가들의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의 평균,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개별 대상국가들의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연구기간동안 연구대상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7.7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평균 실업률은 1985년에서 1989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의 개별 국가의 추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국가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연구대상국가들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평균 2.17%의 완전고용상태를 보이나, 1992년도에 이르러 5.20%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독일은 1985년도 7.90%의 높은 실업률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2년도에는 다시 조금 상승하기는 했지만 4.50%

의 실업률을 보이며 연구대상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구대상국가들 중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국가들은 프랑스(9.86%), 영국(9.23%), 캐나다(9.26%)로 연구기간동안 평균 9.00%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국가들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1985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벨기에, 영국, 프랑스가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1992년에는 캐나다, 호주,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 특히 호주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실업률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상국가들의 실업률 추이를 정리하여 보면,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199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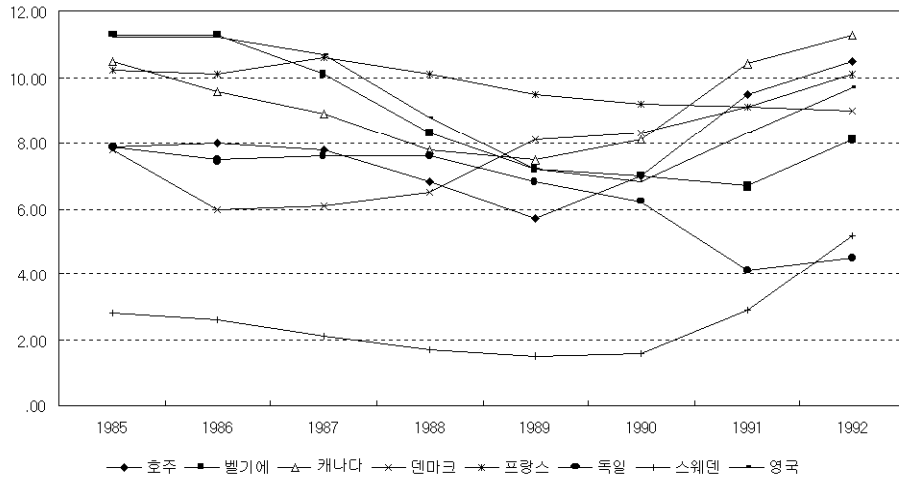
한편, 연구기간 동안 연구대상국가들의 평균 장기실업률은 2.73%이다. 평균 장기실업률 추이는 평균 실업률 추이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1년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장기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로 1987년 8.2%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연구대상국가들 중에는 가장 높은 수치(평균 6.35%)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0.19%)과 캐나다(0.76%)는 연구기간동안 평균 1.00% 이하의 낮은 장기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2〉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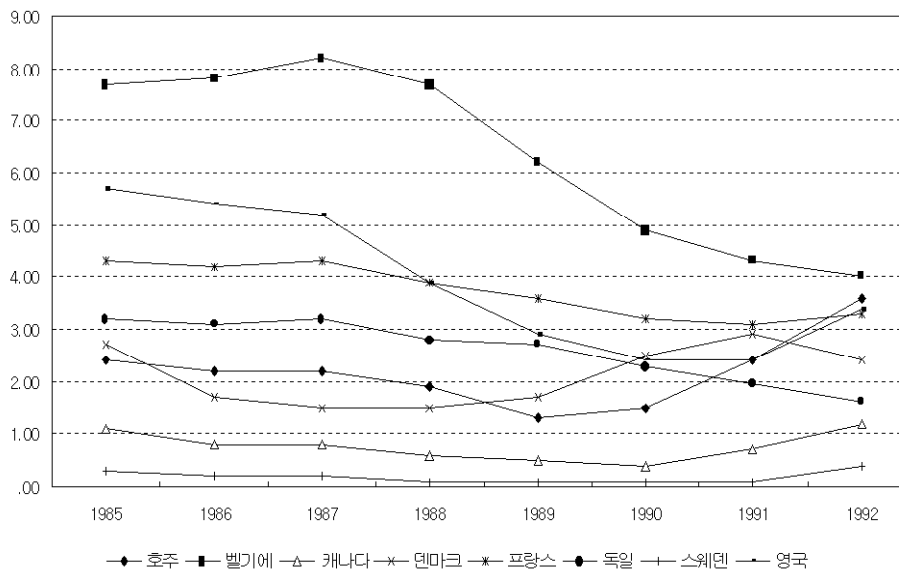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국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전체	
실업률	평균	7.90	8.75	9.26	7.61	9.86	6.53	2.55	9.24	7.71
	최소값	5.70 (1989)	6.70 (1991)	7.50 (1989)	6.00 (1989)	9.10 (1991)	6.20 (1990)	1.50 (1989)	6.80 (1990)	1.50
	최대값	10.50 (1992)	11.30 (1986)	11.30 (1992)	9.10 (1991)	10.60 (1987)	7.90 (1985)	5.20 (1992)	11.20 (1986)	11.30
장기실업률	평균	2.19	6.35	0.76	2.11	3.74	2.61	0.19	3.91	2.73
	최소값	1.30 (1989)	4.00 (1992)	0.40 (1990)	1.50 (1988)	3.10 (1991)	1.60 (1992)	0.10 (1991)	2.40 (1991)	0.10
	최대값	3.60 (1992)	8.20 (1987)	1.20 (1992)	2.90 (1991)	4.30 (1987)	3.20 (1987)	0.40 (1992)	5.70 (1985)	8.20

〈그림 1〉 각국의 실업률 추이



〈그림 2〉 각국의 장기실업률 추이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추이

〈표 3〉은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과 개별 프로그램의 지출, 실업 급여 지출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살펴본 것이다. 실업자 1인당 ALMP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연구기간동안 연평균 26,056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다른 대상국가와 비교할 때, 약 5배에서 10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3〉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도 1991년과 1992년에 실업자 1인당 ALMP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ALMP 프로그램에 대한 총지출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들어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의 실업자 1인당 ALMP 지출을 살펴보면,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ALMP 지출이 1991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ALMP 지출의 증가와 더불어 이전의 시기에 비해 실업자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도 연구기간동안 실업자 1인당 ALMP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1992년에는 각각 8,000달러와 5,000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다. 영국(평균 2,263달러), 캐나다(2,110달러), 호주(1,500달러)의 ALMP 지출은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사용된 실업자 1인당 지출을 보면, ALMP 지출 추이와 거의 유사하다(〈그림 4〉 참고). 연구대상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연구기간 동안 실업자 1인당 평균 8,035달러의 직업훈련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1992년에는 실업자의 급증으로 인해 1인당 지출액이 6,798달러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실업자 1인당 직업훈련지출이 6,827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1992년에는 스웨덴의 지출액을 넘어서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직업훈련 지출의 증감을 반복하는 사이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평균 492달러)과 호주(250달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지출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그림 5〉의 고용보조 프로그램에 사용된 실업자 1인당 지출 추이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벨기에에는 각각 평균 3,156달러와 3,144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덴마크도 연구기간동안 실업자 1인당 평균 1,112달러로 1,000달러 이상의 고용보조

지출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실업자 1인당 고용보조 지출이 1980년대 중반에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에는 5,385달러로 대상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평균 393달러), 영국(378달러), 캐나다(98달러)와 같은 영·미권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고용보조 프로그램 실시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실업자 1인당 고용보조 지출 금액이 1991년까지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 1인당 구직서비스 지출은 전반적인 추이가 ALMP지출 추이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그림 6〉 참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캐나다의 지출 규모가 평균 830달러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덴마크의 지출 규모(평균 346달러)와 추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의 구직서비스에 대한 지출 규모는 영국과 호주의 평균 606달러와 467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간 내내 400달러 미만으로 대상국가들 중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지출 규모는 평균 3,018달러로 연구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나, 1991년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 내내 스웨덴보다 지출규모가 작았지만 1991년 이후 지출 규모(2,364달러)가 스웨덴의 그것을 넘어 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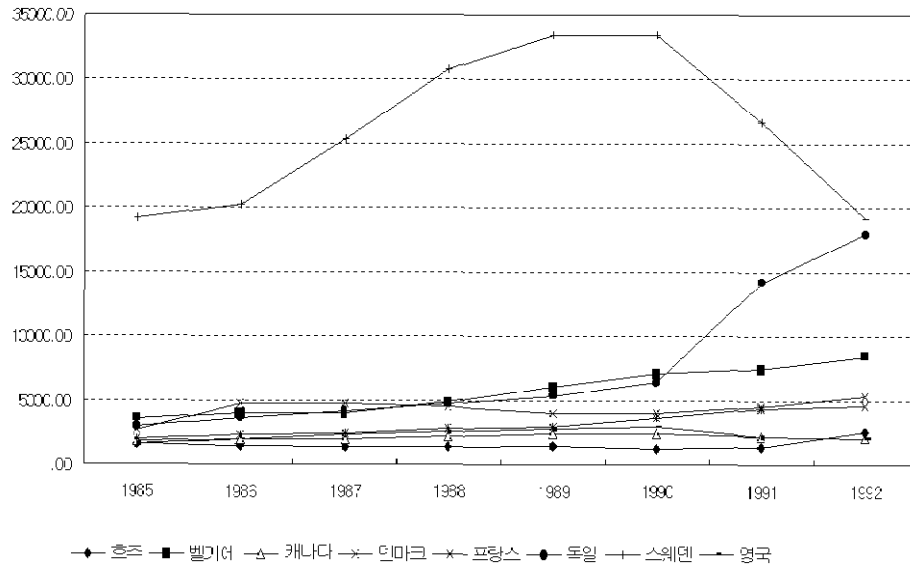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포함하는 실업자 1인당 실업급여 지출 추이를 보면, 국가들간의 지출 추이가 ALMP지출 추이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덴마크는 연구기간동안 실업자 1인당 평균 16,573달러를 지출해 대상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평균 13,256달러)과 벨기에(12,916달러)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1990년 이후 실업자 1인당 15,000달러 이상의 실업급여를 지출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1990년 이전까지는 캐나다와 프랑스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실업자 1인당 실업급여액을 지출했으나, 1991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2년에는 20,724달러로 대상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1인당 평균 실업급여지출이 각각 3,584달러와 5,074달러로 ALMP 지출 규모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도 적은 편이다.

〈표 3〉 실업자 1인당 ALMP 지출, 직업훈련, 고용보조, 구직서비스, 실업급여 지출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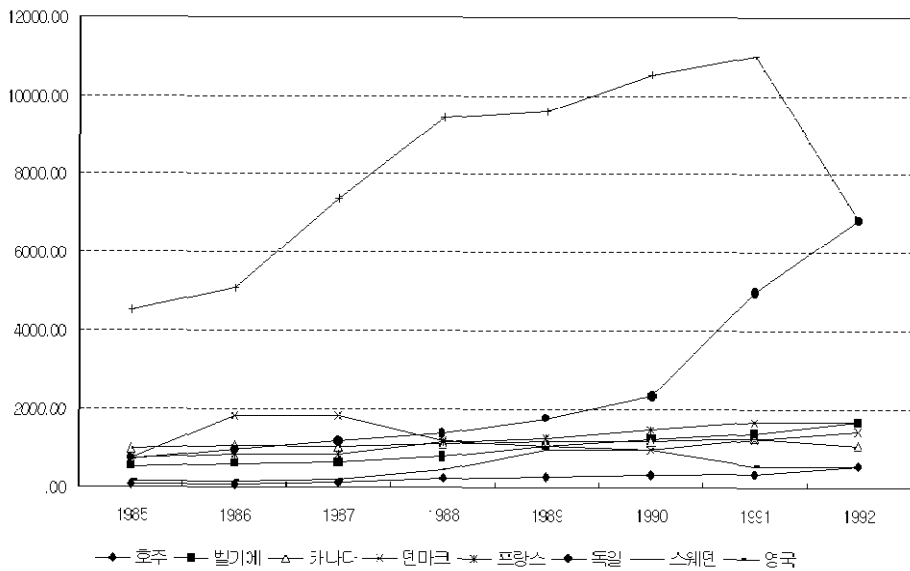
(단위 : 1992년 US 달러)

구분	국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평균
ALMP	평균	1500.53	5678.90	2110.94	4302.68	3112.40	7382.16	26056.64	2263.22	6551.81
	최소값	1244.67 (1990)	3538.85 (1985)	1789.06 (1985)	2713.65 (1985)	1946.12 (1985)	2873.00 (1985)	19142.83 (1985)	1572.34 (1985)	1244.67
	최대값	2488.97 (1992)	8470.31 (1992)	2393.79 (1989)	5315.48 (1992)	4634.12 (1992)	17932.33 (1992)	33487.65 (1990)	2851.16 (1989)	33487.65
직업훈련	평균	250.35	980.21	1111.85	1288.29	1206.83	2517.73	8035.82	492.13	1985.40
	최소값	59.49 (1985)	521.02 (1985)	977.19 (1985)	740.40 (1985)	760.04 (1985)	717.46 (1985)	4532.91 (1985)	145.14 (1985)	59.49
	최대값	552.53 (1992)	1649.82 (1992)	1264.66 (1991)	1837.67 (1986)	1676.36 (1992)	6827.99 (1992)	11004.55 (1991)	965.70 (1990)	11004.55
고용보조	평균	393.25	3144.03	85.52	1112.38	347.74	1783.30	3156.26	378.93	1300.55
	최소값	161.89 (1990)	2137.96 (1985)	55.04 (1986)	897.48 (1987)	166.18 (1987)	604.22 (1985)	2644.68 (1990)	80.55 (1991)	55.04
	최대값	689.85 (1992)	4424.19 (1992)	228.97 (1992)	1416.51 (1992)	807.93 (1992)	5385.27 (1992)	3873.18 (1985)	775.11 (1987)	5385.27
구직서비스	평균	467.71	806.65	830.70	346.56	479.32	1373.33	3018.94	606.16	991.55
	최소값	399.82 (1986)	446.81 (1985)	660.64 (1985)	275.07 (1985)	377.15 (1987)	754.69 (1985)	1563.77 (1992)	349.28 (1985)	275.07
	최대값	774.87 (1992)	1327.22 (1992)	1026.33 (1989)	400.75 (1988)	625.05 (1991)	2500.05 (1992)	4474.29 (1989)	838.70 (1990)	4474.29
실업급여	평균	5074.44	12916.21	6887.87	16093.70	7638.78	9351.59	13256.51	3538.24	9344.67
	최소값	4214.43 (1988)	9088.25 (1985)	5121.81 (1985)	13817.85 (1985)	6694.74 (1987)	5093.72 (1985)	7919.06 (1985)	2679.03 (1989)	2679.03
	최대값	6192.38 (1992)	19954.69 (1992)	8451.37 (1990)	17841.88 (1992)	9035.07 (1991)	20724.65 (1992)	18000.45 (1991)	4563.48 (1992)	2072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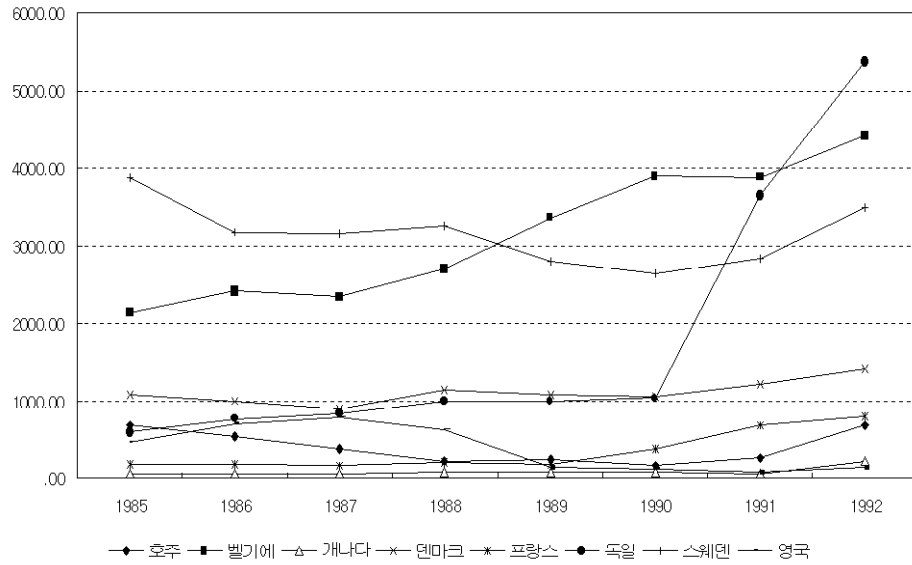
〈그림 3〉 각국의 실업자 1인당 ALMP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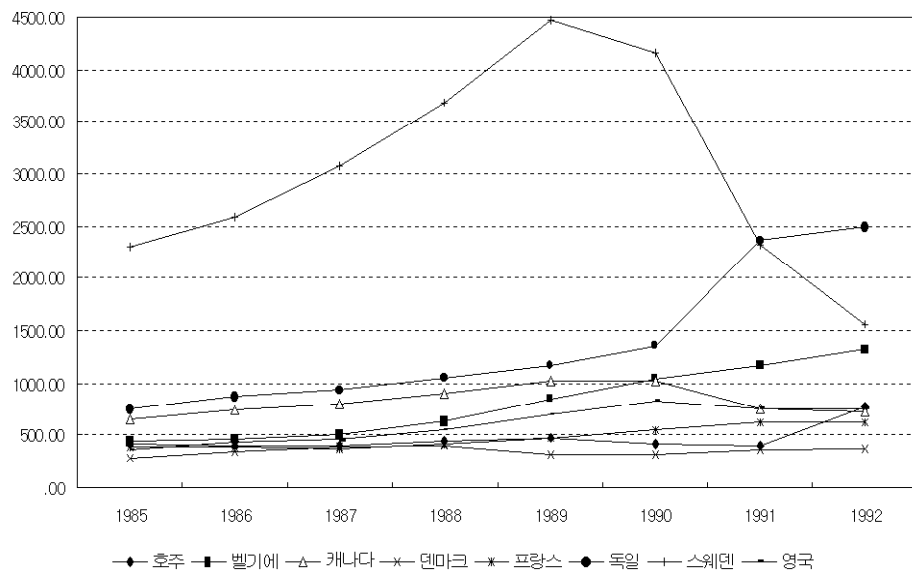
〈그림 4〉 각국의 실업자 1인당 직업훈련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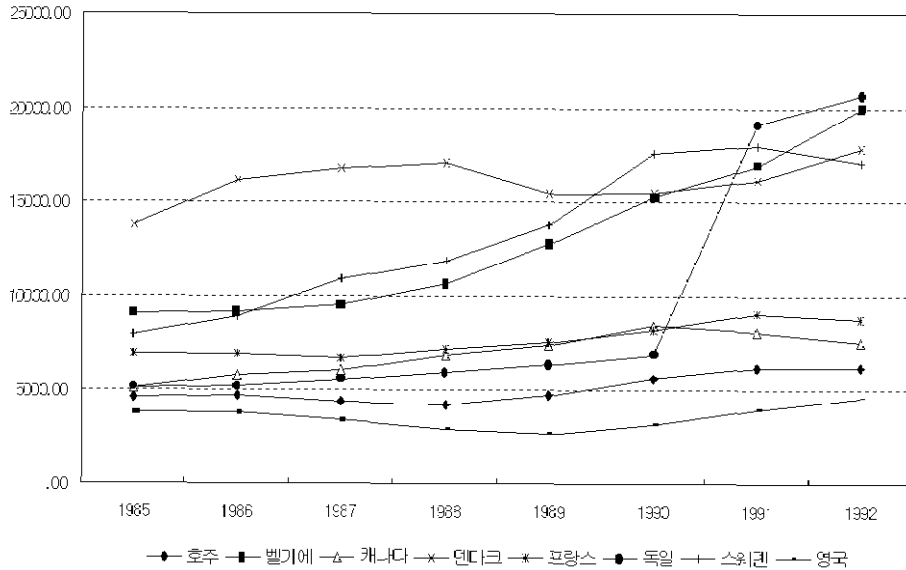
〈그림 5〉 각국의 실업자 1인당 고용보조 지출 추이



〈그림 6〉 각국의 실업자 1인당 구직서비스 지출 추이



〈그림 7〉 각국의 실업자 1인당 실업급여 지출 추이



3) 기타 독립변수들의 추이

〈표 4〉는 대상국가들의 1인당 실질GDP,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노조조직률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기간 중 대상국가들의 평균 1인당 실질 GDP는 13,828달러이며, 모든 국가들이 11,237달러(영국, 1985년) 이상의 1인당 실질 GDP를 기록하고 있다. 대상국가들 중 1인당 실질GDP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평균 16,614달러이며, 호주(평균 14,259달러)와 스웨덴(13,680달러)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캐나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1990년대 들어 1인당 실질GDP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벨기에, 독일, 덴마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91년과 1992년의 1인당 실질GDP가 각각 14,736달러와 14,703달러로 연구대상국가들 중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상국가들 중 평균 1인당 실질GDP가 13,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영국(평균 12,532달러)과 벨기에(12,457달러)이다.

대상국가들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0.99%이다.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상승

률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독일(2.59%), 영국(2.48), 덴마크(1.66%), 스웨덴(1.08%)이다. 반면에 호주와 캐나다는 마이너스 임금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캐나다도 1988년까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임금상승률의 증감이 반복됨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상승률의 변화 추이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개별 국가들마다 매우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표 4〉 1인당 실질GDP,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노조조직률 추이

(단위 : 1992년 US 달러; %)

구분 \ 국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평균	
G D P	평균	14,259	12,457	16,614	13,647	13,255	13,680	14,187	12,532	13828.33
	최소값	13,583 (1985)	11,285 (1985)	15,589 (1985)	12,969 (1985)	12,206 (1985)	12,535 (1985)	13,451 (1985)	11,237 (1985)	11,237
	최대값	14,854 (1989)	13,474 (1992)	17,519 (1989)	14,114 (1992)	13,925 (1992)	14,736 (1991)	14,741 (1990)	13,242 (1989)	17,519
임 금 상 승 률	평균	-1.33	0.91	-0.14	1.66	0.64	2.59	1.08	2.48	0.99
	최소값	-3.70 (1986)	-1.20 (1985)	-1.20 (1985)	0.00 (1989)	-0.10 (1985)	1.20 (1992)	-3.50 (1991)	-0.10 (1990)	-3.70
	최대값	1.50 (1992)	2.40 (1989)	1.90 (1992)	5.10 (1987)	1.20 (1992)	3.90 (1987)	3.30 (1989)	4.10 (1986)	5.10
물 가 상 승 률	평균	6.33	2.65	4.19	3.61	3.35	2.19	6.26	5.68	4.28
	최소값	1.00 (1992)	1.20 (1988)	1.50 (1992)	2.10 (1992)	2.40 (1992)	-1.00 (1986)	2.30 (1992)	3.40 (1986)	-1.00
	최대값	9.10 (1986)	4.90 (1985)	5.60 (1991)	4.80 (1989)	5.80 (1985)	4.00 (1992)	10.50 (1990)	9.50 (1990)	10.50
노 조 조 직 률	평균	41	57	28	72	9	31	86	36	45
	최소값	38 (1992)	56 (1989)	28 (1985)	71 (1990)	7 (1992)	25 (1992)	85 (1990)	32 (1992)	7
	최대값	43 (1985)	58 (1992)	28 (1992)	74 (1986)	12 (1985)	33 (1986)	88 (1992)	39 (1985)	88

대상국가들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4.28%이다. 그 추이를 보면, 198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나 1992년에는 다시 2.43%로 크게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치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만 다른 국가들의 변화양상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1986년 9.1%를 시작으로 1990년까지 감소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국가들은 독일(2.16%)과 벨기에(2.65%)이며, 스웨덴의 물가상승률은 평균 6.2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연구대상국가들 중 노조조직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평균 86%의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덴마크와 벨기에도 각각 72%와 57%의 노조조직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노조조직률은 10% 내외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평균 9%),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도 각각 평균 28%와 31%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개별 국가들의 노조조직률의 추이를 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독일의 경우만 1991년도에 32%에서 25%로 크게 감소하였다.

5. Fuller-battese Model 을 이용한 분석 결과

1) 실업률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의 <표 5>는 실업률 변화를 종속변수로 두고 결합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분석에서 세 개의 결합회귀모형을 구성하였는데, 모델 1은 독립변수들과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변화를 포함한 기본 모델이고, 모델 2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변화를 실업자 1인당 직업훈련비 지출변화, 고용보조 지출변화, 그리고 구직서비스 지출변화의 세 가지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모델 3은 모델 2에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변화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모델 1의 분석 결과, 실업률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1인당 실질 GDP 변화와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변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변수는 실업을 변화에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경제 성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가 실업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성장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내용이 다소 다른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개별 프로그램들이 실업을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프로그램 지출이 실업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모델 2의 분석 결과는 1인당 실질GDP 변화와 더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중 실업자 1인당 고용보조 지출변화, 그리고 실업자 1인당 구직서비스 지출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변수의 실업률 변화에 대한 영향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보조의 경우는 정적인 관계를 갖는 반면 구직서비스의 경우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조가 실업률의 변화와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이 프로그램이 정규직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또는 다른 부문이나 경쟁 기업에서 실업을 증가시키는 탈구효과

〈표 5〉 실업률 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상수	0.209***	0.041	0.133***	0.040	0.125***	0.038
실질 임금 변화율	-0.009	0.009	-0.001	0.008	-0.001	0.007
GDP 변화	-5.166***	0.784	-3.716***	0.771	-3.926***	0.735
소비자 물가 상승률	-0.018	0.007	-0.005	0.007	-0.008	0.007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0.902	0.435	0.271	0.391	0.200	0.369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	-0.188	0.137	-0.211	0.121	-0.006	0.140
ALMP 지출 변화	-0.274*	0.111				
직업훈련 지출 변화			-0.024	0.056	0.079	0.067
고용보조 지출 변화			0.091*	0.040	0.121**	0.039
구직서비스 지출 변화			-0.432***	0.108	-0.283*	0.118
상호작용					-0.001*	0.001
R ²	0.701		0.784		0.810	

비고 : 상호작용 :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 × ALMP 지출 변화.

* p<0.05, ** p<0.01, *** p<0.001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⁰⁾ 구직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출 변화가 실업률 변화에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입안과 관련해 보면 이러한 결과는 구직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시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직서비스 프로그램만을 확대한 미국의 경우, 실업자는 감소하였으나 근로하는 빈자(*working poor*)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199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 감소 메커니즘 중 하나는 훈련을 통해 기술과 관련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구조적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이점에서 특기할 만한데, 왜냐하면 훈련비의 지출 증가가 어떤 모델에서도 실업률의 변화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추론을 가능케 하는데, 첫째는 1인당 실질GDP 변화율이 실업률의 변화와 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의 성격이 구조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실업이 노동력의 수요·공급 불일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에 따른 것이라면 훈련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3)가 주장하듯 훈련만으로는 실업을 감소시킬 수 없으며, 훈련과 구직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을 때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직서비스가 실업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가능성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셋째, 이러한 결과는 캄포스(Calmfors, 1994)가 주장하는 속박효과(*lock-in effect*)가 훈련의 실업 감소 효과를 압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상호작용 변수가 포함된 모델 3의 분석결과는 모델 2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업률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들은 1인당 GDP 변화와 실업자 1인당 고용보조 지출변화, 그리고 실업자 1인당 구직서비스 지출변화이다. 그 중 1인당 GDP 변화와 구직서비스 지출 변화는 실업률 변화에 부적 영향력을 가지며, 고용보조 지출변화는 실업률 변화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또한 실업률 변화를 설명하는 데 상호작용 변수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10)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기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이 고용보조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데, 이는 실업자 1인당 실업급여액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증가할 때 실업률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관대한 실업보험은 근로의욕을 낮추어 실업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될 때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론적 측면에서 본 논문의 결과는 근로의욕이 단지 실업급여에만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는 올라프손(Olafsson, 199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논문의 결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일자리에 탐색에 대한 어려움을 감소시켜 관대한 실업급여 수준으로 인한 근로의욕의 감소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구직서비스 지출 변화가 실업률의 변화와 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고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 각 국에서는 실업보험의 근로의욕에 대한 부정적 효과 때문에 수혜액을 축소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향성은 새로운 문제점을 내포할 수도 있다. 즉 낮은 실업보험 수혜는 저임금 부문의 취업을 강요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의 확대나 근로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을 양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실업률을 낮추면서 동시에 저임금 부문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의 상호작용이 실업률의 변화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정책을 탐구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실업률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장기실업률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장기실업률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실업률을 종속변수로 한 <표 6>의 분석 역시 세 가지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전체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모델 1의 분석을 보면, 1인당 실질GDP 변화, 소비자 물가증가율,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그리고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변화 변수들이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변수들의 장기실업률 변화와의 관계는 모두 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장기실업률 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상수	0.461***	0.124	0.371**	0.132	0.318*	0.128
실질 임금 변화율	-0.024	0.023	-0.010	0.025	-0.013	0.024
GDP 변화율	-4.066*	1.972	-3.315	2.157	-3.455	2.117
소비자 물가 상승률	-0.083***	0.020	-0.066**	0.022	-0.065**	0.027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3.187**	1.145	-2.719*	1.211	-3.042*	1.166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	-0.635	0.331	-0.674	0.346	-0.224	0.390
ALMP 지출 변화	-0.658**	0.238				
직업훈련 지출 변화			-0.124	0.140	0.112	0.171
고용보조 지출 변화			0.065	0.103	0.134	0.105
구직서비스 지출 변화			-0.578*	0.278	-0.200	0.317
상호작용					-0.001*	0.001
R ²	0.500		0.515		0.550	

비고: 상호작용: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 × ALMP 지출 변화.

* p<0.05, ** p<0.01, *** p<0.001

다시 말하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장기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는 노동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임금인상을 제어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장기실업자를 축소하게 되면 구직 경쟁이 증가하게 되어 과도한 임금인상이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실업률을 낮출 수도 있다. 본 논문의 결과도 이러한 논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장기실업자를 축소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만을 지지할 뿐 장기실업자의 축소가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총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분석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장기실업률을 경유해 실업률 전반을 하락시킨다는 메커니즘의 모든 과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인상 억제효과 이후의 과정은 후속 연구에 의해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OECD(1993: 51)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장기실업률을 경유해 전체 실업률을 낮춘다는 메커니즘은 신뢰할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모델 2의 분

석 결과, 세 가지 프로그램 중 구직서비스 지출 변화가 장기실업률 변화에 부적인 관계에서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들은 근로의욕이 저하된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직서비스 프로그램은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 구직서비스가 실업률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구직서비스 프로그램이 실업률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직서비스 지출 변화 이외에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노동조합조직률 변화도 장기실업률 변화에 부적인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인당 실질GDP 변화는 장기실업률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실질임금변화율과 1인당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도 장기실업률 변화에 별 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델 3의 분석은 장기실업률 변화와 구직서비스 지출 변화의 부적인 관계도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할 경우 더 이상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업자 1인당 실업급여 수혜액 변화와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변화의 상호작용변수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노동조합조직률 변화 변수가 장기실업률 변화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 효과는 실업자 1인당 실업급여 수혜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 때, 장기실업률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도 일반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의 분석과 동일한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관대한 실업보험은 장기실업자의 근로의욕을 낮추어 실업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될 때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실업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어떻게 실업을 최소화하느냐는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디서나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1980년대 이래로 실업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본 연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률의 변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결합회귀분석 방법의 하나인 Fuller-Battese 모델을 사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역시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은 실업률이나 장기실업률의 변화 모두와 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업률의 변화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부 효과는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 프로그램 중 실업률과 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구직서비스였다. 이는 구직서비스가 실업자와 결원(*vacancy*)을 연결시켜줌으로써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고용보조의 경우 실업률의 변화와 정적인 방향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는 이미 선행 연구에 있어서도 자중손실의 문제나 대체효과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하게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실업 감소의 수단으로 고용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¹¹⁾

다섯째,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직업훈련을 고용서비스와 적절하게 결합하는 경우 실업감소 효과가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직업훈련의 효과는 다른 제도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관대한 실업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업보험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절하게 결합될 경우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

11) 이 점과 관련해 고려해야만 하는 또다른 문제는 고용보조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소득보장 효과이다. 이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와 고용보조에 따른 소득보장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득평등과 낮은 실업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Iverson & Wren, 1998)에서 후자를 위해 전자를 희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들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소득평등과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들을 결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이 갖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있으나 아직까지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탐색해 보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¹²⁾ 대체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많은 경우 서구의 경험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이 실시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률 감소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상황에 함의하는 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가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다는 결과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선택과 실행을 위해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결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결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¹³⁾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 없이 단기적인 효과나 가시적인 효과만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 한국에서의 연구로는 김장호, 1999; 강순희·노홍성, 1999; 김종일, 2000; 유길상 외, 2000 등을 들 수 있다.

13) 참고로 유럽의 경우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결원의 경우 법적으로 고용사무소(*employment office*)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호작용 효과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데에 다양한 제도들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보다 많이 주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케 한다. 즉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경우 관련 제도들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단편적이고 편협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의 실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발현하지 못해 매우 제한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경우 실업률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다 포괄적인 초점들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업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구직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구직서비스만을 강조하는 경우 소득불평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구 선진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발달 수준이 아직도 많이 뒤쳐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업률의 감소에만 초점을 두고 정책을 디자인하는 경우 소득불평등은 급속하게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률의 감소라는 측면과 더불어 소득불평등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카리볼 수 있는 필요성, 즉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경제위기 이후 공공근로 사업의 규모는 실업률의 변화에 따라 증감을 거듭한 반면 참여자에 대한 수혜는 소득불평등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공근로 사업을 실업률 감소라는 차원에만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를 실업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소득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이는 프로그램 참여와 실업보험 수혜 자격의 연계나 프로그램 참여 시 수급의 대폭적인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실증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 감소 효과에 대해 서구 선진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함을 통해 그 관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 작업에 기초한 우리나라에 대한 합의 개발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분석 노력이 병행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보다 정교하게 디자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희·노홍성, 1999. “직업훈련의 취업 및 소득효과,” 《제1회 한국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김장호, 1999.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정책,” 《경제학 연구》 제47호, 서울 : 한국경제학회.
- 김종일, 2000. “미국의 노동중심적 복지개혁에서의 ‘노동시장연결’모델과 ‘인간자본개발’모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제41호, 여름, 서울 : 한국사회복지학회.
- 유길상 외, 2000.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Aaberge, R. (et al.), 2000. “Unemployment Shocks and Income Distribution: How did the Nordic Countries Fare during their Crisi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02, No. 1.
- AMS, 1999. *Labour Market Policy Programmes in Sweden: annual report 1988*, Stockholm: AMS.
- Blanchflower, D. G. (et al.), 1995. *Some Reflections on Swedish Labour Market Policy*, Stockholm: Ministry of Labour.
- Calmfors, L., 1994. “Active Labou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rucial Design Features,” *OECD Economic Studies*, No. 22, Spring.
- Calmfors, L., Skedinger, 1995. “Does Active Labour-Market Policy Increase Employment?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Some Empirical Evidence From Swede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11, No. 1.
- Edin, P-A., Holmlund, B. 1991. “Unemployment Vacancies and Labour Market Programmes: Swedish Evidence,” Schioppa, F. P. (ed.), *Mismatch and Labour Mo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 Forslund, A., Krueger, A. B., 1997. "An Evaluation of The Swedish Active Labour market Policy: New and Received Wisdom," Freeman, R (eds.),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Reforming the Swedish Mode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nsburg, H., 1983. *Full Employment and Public Policy: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 Gujarati, D., 1995. *Basic Econometrics*, New York: McGraw-Hill, Inc.
- ILO, 1999.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CD-ROM data set, Geneva: ILO.
- Iversen, T. & Wren, A., 1998.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Vol. 50, No. 4.
- Layard, R., 1997. "Sweden's Road Back to Full Employment," *Economic & Industrial Democracy*, Vol. 18, London: Sage.
- Layard, R., Nickell, S., Jackman, R., 1991. *Unemploym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Labour Mark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ickell, S., 1997. "Unemployment and Labour Market Rigidities: Europe versus North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1, No. 3. Nashvill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OECD, 1993.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_____, 1994. *OECD Job Study: Evidence and Explanations*, Paris: OECD, 노동부 옮김, 1998. 《The OECD Job Study - 증거와 설명》, 서울: 노동부.
- Olafsson, 1992. "The Rise or Decline of Work in the Welfare State? Equality and Efficiency Revisited," Kolberg(ed.), *Between Work and Social Citizenship*, London: M. E. Sharpe.
- Regnér, H., 1997. *Training at the Job and Training for a New Job: Two Swedish Studies*,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Dissertation Series 29, Stockholm: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Schmid, G., Reissert, B., Brucke, G., 1992.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inancing System*,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Trhörnning, P., 1993. *Measures to Combat Unemployment in Sweden*, Stockholm: Swedish Institute.

A Study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

An Analysis Using Fuller-Battese Model

Kang, Chul-Hee (Associate Professor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Kim, Kyo-Seong (Senior Lecturer of Social Work, Soong Sil University)

Kim, Young-Bum (Researcher of Social Science Brain Korea 21 Project,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the unemployment rates in 8 welfare states.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major predictors of the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and what is the effe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Using the data from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by Stephens (1997),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by ILO(1999)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by OECD(1999),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Fuller-Batte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analysis,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This paper analyzes the predictors by using 3 analysis models about 2 types of unemployment (overall unemployment and long term unemployment). Results are as follows: (1) economic variable such as changes in GDP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2)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as well; (3) job brokering service among 3 maj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and (4) there i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unemployment benefit level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valuable knowledge about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unemployment in 8 welfare states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Korea.